

문민정부 이후 韓·日 관계 진퇴 추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05. 5. 10, 화)

I. 검토 배경

II. 韓·日 관계 진퇴의 특징

III 시대별 韓·日 관계

1. 「문민 정부」 시대의 관계 경색
2. 「국민의 정부」 시대의 관계 부침
3. 「참여 정부」 출범 이후

IV. 日側 행태의 배경 및 전망

V. 우리의 대응기조

VI. 우리의 대응전략 (保安상 삭제함을 양지바람.)

I. 검토 배경

- “문민정부 이후 한·일관계 진전과 후퇴” 과정을 고찰, 한·일관계 부침의 근본적 이유와 시사점을 도출

II. 韓·日 관계 진퇴의 특징

- 문민정부 이래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 미봉으로 상시적 갈등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연속



※ 참여정부는 단선적·감정적 대응보다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 추구

- 상기 악순환은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갈등으로 최근에는 동 악순환의 심화·고착화 경향 현저
 - 일본은 역사왜곡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 나가는 가운데 양국관계와 과거사 문제의 분리접근을 시도
 - 특히 최근 역사왜곡과 함께 그간 자제해 왔던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제기
 - * 일본내 소위 戰後型 右翼 정치인은 과거와 달리 역사부채 의식이 부재

III. 시대별 韓·日 관계

1. 「문민 정부」(93.2-98.2) 시대의 관계 경색

- 초기에는 양 정상간 ‘새로운 韓·日 善隣 동반자’ 구축 천명(93.11) 및 日측의 日軍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총리의 일제만행 최초 공식사죄(95.8)등을 바탕으로 우호관계 유지
- 그러나 일본내 진보세력 부상에 위협을 느낀 보수세력들이 반발, 과거사 미화·합리화 발언에 따라 관계가 급속 냉각
 - 「와타나베」前외상(95.6 韓·日합방 원만 체결), 「에토」총무청 장관(95.10 일제 조선 근대화 기여) 망언과 함께 「무라야마」총리마저 “韓·日합방이 適法 체결되었다” 고 발언(95.10)
 - 이에대해 우리측은 김영삼 대통령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경고(95.10)와 함께 韓·日 정상회담 취소, 韓·日議聯 합동 총회 무기 연기 등으로 대처
 - 「에토」총무청 장관 경질(95.11) 및 「무라야마」총리의 사죄 친서 전달(95.11) 등으로 일단 갈등 봉합

□ 日 「하시모토」 내각 출범(96.1) 이후에는

- 실무형 정상외교(96.6 제주, 97.12 벵푸) 등을 통해 외형상 정상간 친분관계가 형성되고 협력이 내실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 결국 日측은 「하시모토」 총리가 日 총리로서는 11년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96.7)하고, 우리가 외환위기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어업협정 파기(98.1)

2. 「국민의 정부」 (98.2-03.2) 시대의 관계 부침

□ 정권 출범초 우리의 미래지향적 韓·日관계 구축 의지에 日측도 화답하는 등 전례없는 우호·협력분위기 형성

- 우리는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 대처방침을 밝히고 日 대중문화를 개방했으며 日측도 역사 교과서에 日軍위안부 강제동원을 서술
-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간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98.10)하고 韓·中·日 정례 정상회의(99.11 이래 6회)를 통해 역내 평화·번영문제도 논의

※ 동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과거사를 직시하는 바탕위에서 미래지향적 관계 지향에 합의한 바, 양국관계 발전의 이정표로 평가

□ 그러나 現 내각(01.4 출범)이 들어선 후 역사 부채의식이 없는 소위 戰後형 右翼 정치인이 주요요직을 장악하면서 과거사 갈등 등으로 관계가 급속히 냉각

- 日 정부는 중학교용 역사왜곡 교과서(후소사 판)를 검정 통과(01.4)시켰고 「고이즈미」 총리도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
- 우리측은 역사왜곡 교과서 수정요구와 함께 駐日대사 소환, 각료·정치권 교류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 대처

- 우리 국내의 反日감정이 다소 수그러지자 「고이즈미」 총리가 성공적 월드컵 공동개최 협의를 명분으로 訪韓(01.10), 관계 회복을 시도
 - 역사분야에서는 歴史共同研究委 발족 수용 및 야스쿠니신사 대체 추모시설 건립 검토의사 등 표명
 - 우리측과 월드컵 공동 개최 성공을 위한 「2002년 국민 교류의 해」 행사 개최 및 청소년·문화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
- 그러나 日側은 월드컵이 성공리에 끝나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대체 추모시설 건립 검토계획도 흐지부지 하는 등 무성의한 자세로 회귀

3. 「참여 정부」 (03.2-현재) 출범 이후

- 과거사 관련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자세(공식 언급 자세, 日측의 자발적 태도 변화기대)를 바탕으로 양국간에는 외형상 교류·협력이 급성장
 - 정상간 셔틀외교가 정착되고 FTA교섭 개시(03.12), 일본의 對韓 영구 비자면제 검토 등 정책협력이 긴밀화
 - 對北정책에 있어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04.5)등을 통해 北·日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등 우리의 대북정책에 부응
 - 민간차원에서도 인적교류가 연 400만명을 돌파하고 일본내 韓流 붐이 확산되는 등 우호 분위기가 고조

- 우리측은 日側의 자발적 반성과 적합한 조치를 기대했으나 동 기대와 달리 日側은 과거사 미화책동과 독도영유권 주장을 노골화
 -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아소」 자민당 정조회장(03.6 창씨개명 강제성 부정)· 「나카야마」 문부상(04.11 日軍위안부 교과서 기술 축소 지지) 등 지도층의 망언도 재연
 - 시마네縣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3.16)에 이어 日 정부도 05년도 外交靑書에 독도 영유권 주장 게재
- 더욱이 우리가 3.1절 기념사·對日 독트린·대통령님의 한일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 등에 대해 “국내용”으로 폄하하면서 냉정대응을 강조하는 등 반성보다는 상황모면에 급급
 - ※ 「고이즈미」 총리는 “양국은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韓·日 우호 기조에 입각, 냉정히 대처해야 하며 現시점에서 일본의 대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 언급(3.16)

VI. 日側 행태의 배경 및 전망

□ 일본측 행태의 배경

- 역사적 요인 : 2차대전후 天皇制가 유지되고 軍國主義 추종 세력들이 戰後 일본 정치·경제 체제를 주도
- 국내정치지형 : ① 역사부채 의식이 없는 戰後型 右翼 정치인의 전면 등장, ② 북핵 문제, 장기불황 등으로 인한 일본 사회 전반의 보수화 경향(「普通國家化」, 평화헌법 개정 등), ③ 日 정치권내 사민당, 공산당 쇠퇴로 진보진영의 견제기능 약화
 - ※ 日 국민중 改憲 지지층 : 94년 44% → 04년 65%

※ 1995-2005년 日 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 변화

성향	정 당	1995		2000		2005	
		중의원	참의원	중의원	참의원	중의원	참의원
보수	자 민	200	95	268	107	249	114
	사키케	21	1	·	·	·	·
	공 명	0	12	48	24	34	24
	자유연합	7	0	·	·	·	·
	소 계(%)	228(44%)	108(42%)	316(53%)	131(51%)	283(58%)	138(57%)
중도 보수	신 진	176	36			·	·
	민 주	·	·	95	57	177	84
	자 유	·	·	39	12	·	·
	소 계(%)	176(34%)	36(15%)	134(26%)	69(27%)	177(36%)	84(34%)
진보	사회(시민)	70	67	14	13	6	6
	공 산	15	11	26	23	9	9
	소 계(%)	85(16%)	78(30%)	40(8%)	36(14%)	15(3%)	15(6%)
	기 타	22	12	10	16	5	5
	총 계	511	252	500	252	480	242

* 중도보수도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성향 점증

- 국제정치지형 : ① 최근 정권출범 후 美·日 관계강화에 편승한 대외적 자신감과 ② 북핵 위협·중국 부상 등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작용

□ 향후 日측 태도 전망

- 상기 국내·국제정치지형을 감안시 日측의 행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일간 상시적 악순환 구조도 심화·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
- 美·日동맹 강화와 改憲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日 사회내 보수·우익세력의 입지 강화 전망
 - * 美·日은 외교·안보장관 연석회담(2+2)을 통해 양자동맹을 지역 및 세계안보 위협 대처로까지 격상시키기로 합의(05.2.19)
- 「고이즈미」以後로 거명되는 「아베」자민당 간사장 대리, 「아소」총무상, 「고가」자민당 前 간사장 등 공히 日本大國化와 과거사 미화에 적극적인 자세

V. 우리의 대응기조

□ 日 정부에 대한 단호하고 지속적인 외교대응

- 과거의 반성과 사과를 백지화하는 日側의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기있게 요구

□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對 일본국민 설득 강화

- 궁극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국민들이 역사를 바로알고, 한·일 두 나라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하여 일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설득

□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근거한 국제사회 설득

- 국제관계가 힘과 국익에 근거한 것이 현실이나 다른 한편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임을 감안, 지속적 국제사회 설득 노력 경주
 - 일본이 아시아, 세계질서 주도국가가 되려면 역사의 대의에 부합하게 처신하고 확고한 평화국가로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

□ 냉정한 이성과 논리에 근거한 종합적·체계적 대응

- 對日 대응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지구전이므로 신중한 판단, 언행속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
 - 단호한 대응 중에도 지나치게 감정을 자극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자제
- 동북아 역사문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을 연구·개발할 상설 전담기구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 출범

VI. 우리의 대응전략 (保安상 삭제)

- 한·일관계의 진퇴는 상기 諸요인(역사적 요인, 국내·국제정치지형)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인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종합적 대응 필요

//끝//